

다산포럼

‘개념’의 부재가 진정한 국가 위기다



김 동 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축적의 시간’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한국 산업기술의 위기는 ‘축적된 경험’에 기초한 ‘개념설계 역량’이 없는데 기인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은 선진국의 개념을 모방 개량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한 점에서 성공한 나라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개념설계 역량이 없어 선진국이 되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국가나 대기업이 모방·개량이 아닌 독자적인 개념설계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기는 90년대 중·후반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큰 환란을 맞이한 이후 한국의 국가와 대기업은 단기적인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 더 매달렸다. 그래서 거시 산업정책을 구성하고 개념설계

역량을 구축하여 기술 도약을 이루려 하기도는 조립가공형 산업 체질을 유지한 채, 만만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였다.

그 결과 거대한 내수시장 덕분에 빠르게 기술 축적을 한 중국에 거의 추월당했으며, 축적된 지식을 가진 서구 국가들과의 거리는 거의 좁히지 못했다. 그리하여 반도체·조선·자동차 몇 개 산업, 그리고 10대 재벌 대기업에만 국가적 부가 집중되었고, 그 이하 모든 기업, 모든 산업, 모든 노동자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국가는 재벌 대기업의 R&D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에 리서치(Research)는 없고 디자인(Design)만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기업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 연구 투자를 하기보다는 모방·개량을 하거나 자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것이 더 편했는지 모른다.

산업 분야에서 추상적인 개념설계 역량이 약한 이유는 당장의 실적을 요구하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정책과 그에 편승한 교수나 연구자들의 용역 수주 경쟁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PRIME,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은 산업의 요구대로 교육을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대학 인문계 정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학부생이 공대생이 되면 취업률이 높아질지도 의심스럽지만, 이 사업은 개념설계, 개념 수립을 지향하는 학과나 학문은 없앴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나 대학의 이공계나 인문사회계 모두 기본 개념은 선진국에서 배운 것을 쓰고, 한국은 모방과 적용에만 치중하자고 유도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학 박사 1599명 중 해외 박사는 1162명이고, 서울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의 거의 전원이 미국 경제학 박사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기본 개념은 ‘대국’이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주변부에서는 그곳에서 만든 지식을 소비하는 전형적인 지식 하청 주변부 국가의 모습이다.

선진국이 과연 수백 년의 경험적 축적, 자유로운 학문적인 토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해 얻는 지식을 ‘조금 얻어’ 가르쳐 주고 이전시켜 주던가?

‘축적의 시간’에서는 개념설계 역량이 없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인문·사회과학 이론과 개념이 없는 지적 문화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 문화 콘텐츠의 기반을 고갈시켜 세계의 주도 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인구 대비 세계 최고의 미국 유학생 수를 자랑하는 한국은 매년 7조 원 이상의 돈을 미국 교육기관에 갖다 바친다. 한국의 인문학이 중국 문화의 일부로 흡수되고, 사회과학이 미국발 신자유주의 이론의 모방 가공품으로 남아 있다면, 한국의 문화·관광·교육의 정체성과 경쟁력은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선진 지식의 학습이나 교류, 그리고 지식의 보편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만큼의 독자적인 개념 구축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지식 후진국 한국의 현실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독자의 개념과 이론, 자기가 서 있는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자생적 지식 없이는, 당장 산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없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

정춘 특·특

역지사지(易地思之)



고 영 훈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3년

36년 전 5월 이즈음,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됐다. 사람 목숨은 허찮았고, 짓밟혔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소리치고 싸웠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다. 변한 게 있다면, 짓밟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인간의 생명은 순간의 이익 앞

돌 일이 아니었다. 옥시는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탓으로 문제를 피해왔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망자와 피해자는 늘어났다. 이 와중에 옥시는 그들의 목숨 값으로 일계 1위를 지켜갔다. 이번에도 역시 사람의 목숨은 우선순위에 포함 뒤로 밀려났다.

이에 국민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옥시 불품 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고 이런 기업은 사라져야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비슷한 일이 기억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남양유업의 갑질 횡포, 그리고 시작된 불매운동, 사실상 지금까지 잘 이어져오고 있는지, 오히려 매출이 더 증가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따질 필요도 없이 관심이 없어진지 오래다.

아마 이번 옥시 사태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 대표는 고개를 숙어 사과했고, 국민은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기업은 한 분기 정도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크게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

당해 낼 자신이 있기에 벌인 짓들이니깐. 나의 이런 예상을 뒤집어 줄 기막힌 시나리오는 나타날 수 없을지.

그래서 아주 쉽고 뻔한 방법을 생각해 봤다. 어렸을 적 친구와 싸우고 왔을 때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자상이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의미다. 초등학생한테나 먹힐만한 사자상이가 무슨 해결 방법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건 어른이다. 내 가족이 중요한 만큼 남의 가족도 중요한 것이고, 내 목숨이 중요한 만큼 남의 목숨도 중요한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찻사의 책임 회피도, 기업 대표의 진정성 없는 사과도,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일마가 피해자라면, 우리 아들이 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절대 잊을 수 없고 불매운동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기 고

건강도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 세 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경제발전과 도시성장은 고용창출, 교육기회, 사회발전 등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환경오염과 위생문제를 낳았다. 이 같은 도시 역기능은 주거위생문제, 생활폐기물, 오수처리, 공해, 수질오염, 지표오염,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주민 생활에서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들어, 시민건강을 위해(危害)하는 요인들을 도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강도시(Healthy City)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건강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증진의 개념과

전략으로 제시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1986년 캐나다 ‘오타와 헌장’에 따르면 건강은 우리가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즐기는 일상생활터전인 도시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므로 도시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도 개인소득 증가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장소의 건강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도시환경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하므로, 시민들이 매일 살아가는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의 건강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풍수지리인 배산임수(背山臨水)나 옛 농경사회로 돌아가자는 유럽의 슬로우 시티(slow city)와 같은 방법들을 현대도시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건강도시는 현대도시에 맞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도시를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일하고, 교육받고, 여가활동을 하는 생활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환경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건강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련 정책이 건강을 집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전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많이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보편적 안전 디자인은 모든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 개념이다.

모든 사람들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Design for All) 제품을 설계하자는 개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대학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교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모든 생애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성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이 같은 디자인은 일상생활용품에서 벗어나 주택시설과 공공시설, 그리

고 각종 생활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보편적 안전디자인은 우리사회가 향후 맞이하게 될 고령사회와 웰빙 사회의 사회적 수요까지 대비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정책과 도시계획 수립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치료적 보건의료 접근체계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을 개선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 불평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부처 간 소통이 어려운 칸막이식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생활환경과 사회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될 것이다. 도시 문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社 說

무엇이 구려서 세월호 특위 조사 겁내는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오는 6월말로 종료된다. 선체는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아 있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조사 활동 기간은 이제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데도 여전히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얼마 전엔 대통령부터 예산 광계를 대면서 특조위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니 이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까지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부터 구조작업이 종료된 11월11일까지 군과 해경 간 주고받은 주피수공용통신(TRS) 녹취록 등을 제출하라는 특위의 요구에 ‘기밀’이라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무래도 정부는 그럭저럭 한 달만 버티자는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 시한을 보장해야 한다. 핵심은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이다. 활동시한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특위는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가 될 선체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6월 말로 보고 7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특위 활동 개시일을 특별법 시행령인 지난해 1월1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의 결된 지난해 8월4일을 실제 활동 시점으로 보게 되면 특위 활동은 내년 2월3일까지 보장된다.

그러나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6월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최소한 선체 인양이 끝날 때까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광주·전남에서도 심각하다는데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가 고혈압까지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폐암뿐만 아니라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일으키는 등 건강 전반을 해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통상 미세먼지 하면 수도관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최대 오염원인 중국과 가까운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와 여수 등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여수 월내동 측정소 미세먼지(10㎍이하 먼지) 최고값은 156㎍/㎥로 기록됐다. 전남은 광주 127㎍/㎥에 이어 여수가 173㎍/㎥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경기의 187㎍/㎥를 넘어선 것이다. 자동차가 오가는 터널 안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0㎍인 것을 감안하면, 엇그제 지역 곳곳은 터

널 속보다 공기가 훨씬 나빴던 셈이다.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에 있지만 국내 경우 자동차의 배기가스도 문제다. 환경 당국은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경우 승용차와 버스, 건설기계 등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 경우 버스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경우에 붙는 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우값을 올리거나 오일 배출량에 따른 과징금 부과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완전 해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 업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오염 실태를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대처해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기차나 천연가스 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장기 시책으로 주민 건강을 보살피는 일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인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경(卿)의 딸이 효우(孝友)하고 공검(恭檢)하여, 마땅히 종묘를 받들고 국조(國祚)를 길이 계승하여야겠으므로, 검은색의 폐백, 분홍색의 폐백과 승마(乘馬)로써 전례(典禮)를 빛나게 한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2년(1453년) 1월 18일자는 왕비로 간택된 신부 집안에 보낸 교서(敎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듬해 1월 현 정음시 절보면 사신리 태생인 14살의 한 소녀는 한 살 나이 적은 임공과 혼례를 올린다.

하지만 1455년 숙부의 왕위 찬탈로 어린 왕은 상왕(上王)으로 물러났다가 끝내 강원도 영월 정령포로 유배된다. 16살 왕과 17살 왕비는 정계전 다리에서 이별해야 했다. 어린 왕은 얼마 후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다리를 ‘임이 영월히 건너간 다리’라는 의미의 영도교(永渡橋) 이름 붙였다.

그녀의 지위는 왕후에서 부인(夫人)으로 낮춰졌고 끝내 궁궐에서 쫓겨났다. 이후 서울 동대문 밖 동방봉 밑에 있던 승방 정업원(淨業院)에서 염색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으며 81세의 나이로 한 많은 세상을 떠난다. 임과 함께 한 시간은 고작 1년여, 슬허에 지식 없

이 이별한 지 64년을 홀로 살았다. 단종비(妃)인 정순왕후(定順王后) 송 씨(1440~1521) 이야기다.

정음 출신 정순왕후와 단종의 못다 이룬 사랑을 주제로 한 서사 무용극(원장 고혜선)이 지난 28일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으로 ‘하늘 연인’의 첫 선을 보인 것이다. 공연은 오는 10월 8일 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열린다. 정음시 산외면 오공리에 자리한 전통문화 체험공간 관변문화에 술원은 아시아문화전당 건설 과정에서 철거된 ‘광주권번’의 부재 일부를 활용해 세워졌다.

1시간여 동안 유료 공연되는 ‘하늘 연인’은 단종과 정순왕후의 비극적인 삶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한국무용을 통해 대형 뮤지컬 못지않은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별채에서 국수를 먹고 사랑채에서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정음 자생자를 음미한 후 공연을 감상하도록 하는 방식도 새로웠다. 쏟아지는 별빛·달빛 아래 고즈넉한 한옥에서 펼쳐지는 서사 무용극 ‘하늘 연인’이 정음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거 기대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